

## ISSF, 사회 노동 기준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보존조치 제시

- 국제사회는 수산 업계에 일어나는 불법 노동, 노동 착취 등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하고 있음
  - 인구의 12퍼센트가 수산물 생산에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4천만 정도의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
    - 특히 이민자,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, 암시장 노동자들의 경우 더 심각함
  
- ISSF는 다양한 NGOs와 함께 수산 업계, RFMOs,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수산물 추적 가능성 및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  - 2020년 10월에 ISSF는 선박 및 생산 시설의 사회 노동 기준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제시함
    - 노동 및 사회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기회를 주며 많은 선박, 가공 시설 및 기타 가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함
  
    - 조치 내용
      1. 가공업자, 무역업자, 운송자, 시장 및 기타 수산업에 관여하는 업계는 생산 시설과 어업 및 가공 선박을 포함하여 공급 과정에 적용되는 공공의 사회노동 기준 정책 및/또는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아래의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다뤄야 한다.
        - a) 강제 노동
        - b) 미성년 노동

- c) 단체 결사의 자유
- d) 임금, 수당 및 고용 계약
- e) 업무 시간
- f) 의료 및 안전
- g) 차별, 희롱 및 학대
- h) 분쟁 메커니즘

2. 본 조치를 위하여 정책의 "공공성"은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 가능하게 공개되었을 경우를 말한다.

※출처: ISSF<sup>1)</sup>

---

1) <https://reports.iss-foundation.org/2020-annual-report/social-labor-standards/>